

# 소비자의 선택과 참여에 의한 경제성장의 제안 [brunch.co.kr/@consumer/31](mailto:brunch.co.kr/@consumer/31)



이성구의 속물경제 : 공정, 정의, 상식의 외침 이상으로... 자유로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속물적 욕구들을 존중하고 잘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에 훨씬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성구의 속물경제](#) 유튜브 참조)

과거 몇 차례 소비자 문제에 관한 생각들을 발표하고 관계자에게 전달도 해 보았지만 거의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충분히 정리해 책으로 출간할 수준이 된 후에 공개하려 했는데. 지인들과 토론하는 가운데 외부로 알려질 수밖에 없어, 미진한 상태라도 관심있는 분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인용 또는 활용 시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버전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eYeZI92u0xY> 아울러 본 문서의 개별 주제 들에 대하여도 유튜브(이성구의 속물경제TV)에서 따로 소개했고, 보다 구체적 내용들은 브런치([brunch.co.kr/@consumer](mailto:brunch.co.kr/@consumer))나 네이버블로그 ([blog.naver.com/anyconsumer](http://blog.naver.com/anyconsumer)) 의 주제별 글들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 제안 배경 및 취지

### 가. 배경

- 모든 국민이 소비자이며 모든 생산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에 있음  
=> 투자와 저축의 목적도 생산을 증가시키고 미래 소비에 대처하려는 것
-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 복지·일자리 확충, 규제·지원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자 육성 및 일자리창출·소득증대→ 내수활성화 → 중소기업문제해결→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정책 구상 했지만 실패
- 실패 원인은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 발상 으로 시장과 소비자를 활용한다는 생각이 결여되었고 나아가 시장의 흐름에 맞서는 무리한 정책 추구.
- 소비자의 선택과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 집행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
  - 4차산업혁명 신기술들은 다수 소비자 선택과 참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함
  - 소비자는 스스로를 위해 선택에 참여하고 추가적 대가 불필요
  -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담보할 다양한 수단 존재

## 나. 취지

-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시장과 소비자의 선택을 활용해 경제문제 해결  
=> 적은 예산으로 효과 극대화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시장환경 조성
- 정부가 직접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 영세상인을 지원하기보다 다수 소비자의 선택으로 정책 목표달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소비자 중심 분산형 경제 정책 집행 환경과 플랫폼 마련
- 소비자 친화적 정책으로 재래시장·영세업자·중소기업 문제해결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4차산업혁명시대 경제성장 도모  
=> 정부가 선택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보다 소비자가 선택한 사업자 지원
- 정부·재정, 기업·사업자단체 중심 정책을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 네트워크로 전환

## □ 한국 경제 주요 당면 과제와 소비자와 함께 하는 개혁 방안

### (주요 과제)

- 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문제
- 나. 청년실업과 일자리 문제
- 다. 주택, 부동산 문제
- 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문제
- 마. 저출산, 교육, 연금 문제
- 바. 미래 산업과 성장 문제
- 사. 국가 안보 외교 관련 문제

가. 중소기업, 영세상인 문제 (<https://brunch.co.kr/@consumer/4> 참조)

-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가 대기업 갑질이라 생각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단편적 화풀이 수준 정책
  - \* 납품가격 인하나 거래 중단을 무리하게 규제하는 경우 기존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신규로 납품할 업체 기회 박탈
  - \* 일방적 보호식 규제보다 공정하고 합리적 거래 관행 형성을 유도(예) : 부당 단가인하(납품위해 투자를 요구 시 적정 가격 보호) 부당거래중단(거래 단절시 상당기간 전 예고) 등
  - \* 납품 위해 제안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지적소유권 제도 검토 (현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곤란)
    - > 중소기업보호에 경제학적, 기술적 접근 필요
-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중소기업 상품을 외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할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에서 비롯,  
유망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보다 중소기업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지원하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
  - \* 중소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소비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A/S 보증 지원
  - \* 전국 네트워크 구축이 곤란한 중소기업 고객 서비스를 공동 해결할 플랫폼 마련
  - \* 소비자들이 중소기업을 믿고 상품 5% 더 구매하고, 불신에 의한 가격 손실이 5% 줄면 연간 중소기업 지원 효과 30조원 이상 vs. 현 중소기업 지원 예산 5조-8조원
- 재래시장, 영세상인의 어려움도 대형마트나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공격하기 보다 소비자를 끌 수 있는 요인 극대화  
=> 문화적 자산은 보존하되 시설 편의성이나 접근성은 제고
  - \* 예컨대 재래시장 접근성, 편의시설 개선 지원 -> 지하 공동개발, 공동 시설(주차·휴게 공간, 통로 등), 지하철역이나 주요거점까지 무빙워크 설치 등
  - \* 개발권 거래제 도입: 문화 보전을 위해 현 상태 유지할 경우 개발권(용적률)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
  - \* 대형마트, 대기업프랜차이즈 규제는 기출점 또는 지배적 위치 대기업 기득권 보장에 그칠 우려

나.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 (brunch.co.kr/@consumer/5, 25 글 참조)

- 정부 주도의 생산성이 낮고 임시적 일자리 창출은 국민경제 부담이 되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해 우려
  - \* 영세사업자들은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일용직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불평
  - \* 정부가 대학들과 함께 추진한 일학습병행제는 비정규직 인턴 1명 만들기 위해 연간 3천만원 내외 지출
  - \*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소비자에게 기여하는 일자리 만들어야 지속 가능
- 일자리 부족도 문제이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우리 사회가 공급하는 일자리의 미스매칭도 문제
- 교육 시스템도 일자리 친화적으로 시장 수요에 신속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 개선
  - \* 실용기술 교육에 대하여도 대학 교육과 유사한 자격과 혜택을 부여하고 설립 운영이나 정원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
-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낮아 중소기업은 가격경쟁에 내몰리고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여력 부족
  - \* 총 고용의 약 90%(약 2,400만명)를 중소기업이 담당하지만 청년들은 장래성이나 브랜드 없는 중소기업 취업 꺼림
  - \* 중소기업은 고객 유지, 재구매에 도움 되는 A/S나 브랜드 자산 축적을 위해 노력하기 어려움.
- 중소기업들이 소비자 서비스 확충에 노력할 경우 일자리 3~5% 약 100만개 창출
  - \* 중소기업의 고객 지원, A/S, 홍보, 마케팅 강화 => 브랜드자산 축적
  - \* 소비자가 선발하는 브랜드 중소기업 사이트를 만들어 중소기업 홍보, 마케팅을 위한 플랫폼 형성
  - \*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셈
  - \* 소비자들의 불만도 감소하고 소비 생활의 수준과 만족도 증가
-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복지, 실업급여 포함)을 강화하되 근로시간, 급여, 해고 등 관련 규제 합리화로 고용증대
  - \* 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 안되면서 기업의 업무 부담만 늘리는 규제를 개혁 (<https://brunch.co.kr/@consumer/34> 참조)

다. 주택 부동산 문제 (brunch.co.kr/@consumer/7,12,14 참조)

- 주택 부동산 문제는 단지 가격 폭등·안정 대책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거 제공 문제로 파악해야 해결 가능
  - \* 현 용적률(주거지역 200% 내외) 규제시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곤란
  - \* 용적률 높이되, 늘어나는 부분은 구매하게 하여 지주 초과이익은 최소화하면서 100만호 공급확대 가능 (2종주거 200%→준주거 350%, 수요 집중 지역은 근린상업 수준 600%로 용적률 상향. 향후 10년간 서울지역에서만 300~500조원 조달 가능, 용도, 용적률 결정은 AI 등을 활용 최고한도 정하고 주민자치 도입) <https://brunch.co.kr/@consumer/65> 참조
- 도심지역에서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작은 학교도 설립할 수 있게 규제 개선, 용적률 또는 개발권 거래제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공원, 공공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
  - \* 정세균 후보 주장 초등학교 아파트 복합건물(초품아) 외, 중고등학교, 대학, 공공기관도 가능
  - \* 연계 교통 및 환승 편의 제고, 배차 간격 단축 등을 통해 역세권 개념 도심 생활권 확대
  - \* 개발제한구역 완화 등은 매년 일정 면적의 개발권을 경매 방식 진행하되 난개발 훼손과 낭비가 없도록 조정
- 무주택계층은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3~9백만원 내외 주거 바우처 지급, 주택보유자는 일정 규모까지 재산세 경감
  - \* 주택가격의 1%(공시지가를 시가의 50%로 추정하면 실효세율은 0.5%) 수준으로 종부세를 포함한 통합 재산세로 부과하면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 20% 내외 하락 (추미애 후보 국토보유세도 주장 내용대로라면 비슷한 수준)
  - \* 다만 중산층 세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간의 형평을 위해 재산세에서 주택수당에 상당 금액 감면
- 민간부문 주택공급 능력이 충분한데 공공주택 무분별한 확장은 예산 낭비 (공공주택은 민간 기피 사업에 한정)
  - \*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소득세, 재산세 외의 부담이나 차별적 불이익은 없애고 민간 임대주택등록에 대한 특별 혜택도 폐지
- 기본 방향은 건축관련 규제 완화로 공급 늘리고, 세제는 단순하게 하여 납세자 불안과 번거로움은 없애며, 주택수당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보편적인 주거복지 실현



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문제(복지, 기본소득 문제 등) <https://brunch.co.kr/@consumer/32> 참조

- 산업화 진전에 따른 생산력 발전으로 국민경제 부담 능력도 증가
  - \* 의료, 교육, 주거 등 기본 니즈 외에 여유롭고 즐거운 삶까지도 복지의 대상으로 확대
-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정보화-기계화로 대량 실업 우려와 함께 광범위한 생활 안전망 구축 필요
- 이에 따라 기본적 복지를 넘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 출발
  - \* 기본소득 장단점: 복지 내용을 정부가 아닌 소비자가 직접 결정, 행정비용 절감 vs 막대한 재원조달 필요
  - \* 선택을 소비자에게 맡길 부분->기본소득, 정부 복지 내용을 선택할 부분->기본복지(혹은 보편복지)로
  - \* 기본소득·기본복지로 사회 안전망 구축 시 최저임금제 기타 경제활동 자유 침해 규제 대폭 완화
- 기본복지도 가급적 바우처로 지급하여 시장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활용
  - \* 다만 미리 내용·금액을 정할 수 없고 실비 정산 시 민간의 공급비용 과장 우려 부분은 공공기관 개입
- 선별·보편 복지 문제 도 복지대상 선별비용과 보편복지를 위한 재원조달비용을 비교해 효율성 판단
  - \* 선별비용 큰 경우 보편복지, 재원조달비용 큰 경우 선별복지 단, 계단식 선별복지의 빈곤을 향한 경쟁 유발 유의
  - \* 니즈를 속일 우려가 크거나 수요자 선택능력이 부족한 분야 외에는 수요자 중심 복지로 전환
- 복지수준 결정 국민적 합의 중요, 지속 가능한 자유 시장경제 유지 관점 최소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재도전이 가능한 의료, 교육, 주거와 휴식이 가능한 수준 이 되어야 할 것임
  - \* 예컨대 20세 초반까지 부모의 도움이 부족한 경우 국가가 교육, 건강, 주거를 보장

## 마. 저출산과 교육, 연금 문제

- 저출산,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지 출산율이 낮다거나 과열 입시 경쟁, 사교육비 부담 해소 문제를 넘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kv63W4Bns5I&t=35s> 참조)
- 목표 출산율을 정하기보다 이민을 포함 행복한 삶을 달성하기 위한 인구, 교육, 종합 경제 정책으로 전환
  - \* 한국의 인구밀도는 1천만 이상 인구 국가 가운데는 가장 높은편(벨라루스에 이어 2위)
  - \* 혼인 출산율은 외국에 비해 낮지 않으므로, 현 저출산 원인은 결혼 지연과 비혼 출산이 낮은데도 있음
  - \*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약 250만(현재 코로나 영향으로 200만)명으로 인구의 5% 수준 => 이민 정책은 국가 장기 발전 관점에서 통합 필요 - 순환적 노동력 수급, 인재 영입 및 정착, 해외자본 유입, 다문화 사회 통합
- 교육 현장은 이념 논쟁에서 탈피해 지역과 학생, 학부모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장으로 ([brunch.co.kr/@consumer/43](http://brunch.co.kr/@consumer/43), 48 참조)
  - \* 대학 구조조정도 정부의 선택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으로, 자사고나 특목고도 지자체와 학부모들의 선택으로
- 다만, 인구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 교육시설 등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시장 니즈에 맞춰 준비하되, 정부는 교육 분야와 다른 산업 분야 그리고 교육법인 출연자에게 환원할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 도출
- 출산, 육아, 교육 문제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복지의 핵심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최고 부가가치 산업의 하나인 동시에 장기적 국가경쟁력의 기초
- 세대별 인구 격차에 따른 연금부담 형평 문제나 향후 예상되는 연금 재정 고갈 문제는 연금자산의 운용을 연금 수혜자 선택에 맡기고 목표 미달성 시에만 정부가 일부 지원하도록 개선하여 예산 부담을 완화
  - \* 앞으로는 소득 대비 연금 부담, 수혜 비율, 연금자산 운용 일체를 본인 선택에 맡기되 정부는 안전 운용을 감시하고 조언하는 역할로 축소하여 연금시스템 개선
  - \* 정부(연금공단)의 과도한 개입은 기업경영에까지 정부가 주주로서 참여하여 자본 시장을 왜곡할 우려

## 바. 미래 산업과 성장 문제

- 산업사회는 지금까지 세차례 산업혁명을 경험했고([brunch.co.kr/26,27,28](http://brunch.co.kr/26,27,28) 참조), 이제 4차 산업혁명 대두
  - \* 1차는 '기계혁명' 18세기 화석연료 사용 증기기관 등장, 2차는 19세기 '에너지혁명' 전기제품, 자동차 등장
  - \* 3차는 정보화혁명으로 전신,전화에서 출발 '인터넷,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은 AI, IOT, 3D프린팅, 신소재, 바이오테크 등 산업기술과 인간의 역할이 통합되는 수준으로 발전
- 산업혁명은 단지 기술 발전의 산물이 아니라 소비자와 영향을 주고 받으며 진화
  - \* 1차는 대중소비자 계층 탄생으로 촉발, 2차는 자동차, 가전제품 보급으로 소비자 선택의 영향 범위(제품, 지역) 확대
  - \* 3차는 정보 축적, 전달 비용을 낮춰 소비자 선택능력이 제고되고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유통업 대변화
- 종래: 저비용 대량 생산과 구매 촉진 마케팅 중요 => 4차 산업혁명시대: 소비자 니즈 반영 플랫폼 중요
  - \* 다수 공급자-소비자들이 기업조직이 아닌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마케팅과 거래가 진행되며 부가가치 창출
  - \* 택시·호텔 하나 없는 세계 최대 택시기업 '우버', 숙박 공유기업 '에어비앤비'
  - \* 소비자들이 직접 서비스를 감시하고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슈머 사회에서 기업가치는 더욱 소비자 관계에 의존
  - \* 글로벌 기업들(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은 소비자와 소통 네트워크 지배
- 4차 산업혁명 성공 여부도 신기술 환경에 따른 소비자 능력 배양 및 신뢰하고 참여할 시장환경 조성에 좌우
  - \* 정부의 직접적인 벤처 창업지원보다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중요
  - \* 대형 플랫폼 규제도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고 다수 소비자 참여 네트워크 형성을 쉽게 하는 경쟁촉진이 우선
  - \* 정부의 일방적 개인정보 규제는 대규모 플랫폼 독점 유지에 기여, 과도한 금융보안 규제는 신산업 발전 저해
  - \* 각종 지식, 정보 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 정부 정책에 AI 도입을 통해 관련 시장 조성

(<https://www.youtube.com/watch?v=PqyoVTKLTK0> 참조)



## 사. 국가 안보와 외교 문제

- 징병제를 성역으로 여기는 고정관념 탈피, 각자 능력에 따라 최적의 방법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선택제 도입
  - \* 유사시 전 국민 동원 체제 갖추되, 평시 숙련병 중심 기술집약적 국방 => 강한 산업이 안보 기초 ([brunch.co.kr/@consumer/53](http://brunch.co.kr/@consumer/53) 참조)
- 현재 약 30여 만명 병사를 기계화, 정보화로 30% 감축하면 높은 급여 지급해도 예산 추가 소요분 10조원 이내
  - \* 기계화, 정보화를 통해 국내 관련 산업 발전 기여, 젊은 청년층 경력 단절 방지로 생산성 제고
- 지원병제 채택시 빈곤층이 주로 군대 간다고 비판하지만, 적절한 군인력 수급에 필요한 급여 지급시 입대 장병 사기 진작 및 3년 복무 시 1억원 저축 가능
- 실용적 국민외교를 통해 상대 국가 국민들의 협력 유도, 대북관계도 정부 주도에서 기업과 소비자 참여로
  - \* 일본과의 적대 외교 탈피, 경제 협력 자원 활용을 통해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과의 민간, 기업, 정부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미.중.러 등 열강과의 외교에 대응

### 결론적으로 완장차고 지시하는 정부에서 소비자 선택을 존중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정부로

- 기업활동 자유를 확대하는 규제개혁도 궁극적으로 정부 선택에서 시장과 소비자의 선택으로 전환하는 것
- 권력기관 개혁도 소수에 의한 선택적 감시에서 다수 소비자들에 의한 보편적 감시로 전환하는 것
- 4차산업혁명 기술 혁신은 다수 소비자들에 의한 보편적 감시와 참여 비용 대폭 완화, 효율성 제고
- 소비자 선택이 존중되고 참여가 보장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 상식은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
- 정부 역할은 건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